

신행정수도건설대책 마련의 5대 원칙

金 容 雄 충남발전연구원장 · 도시계획학박사

참여정부가 정권의 진퇴와 명운을 걸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백년대계의 국책사업의 일방적 중단은 국정운영의 혼란과 국민적 피해는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심각한 신뢰성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 같은 국가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당국이 문제의 근본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이 혹시 자신들의 무능과 안이한 추진방식에도 원인이 있지 않은지 대한 진솔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정부는 얼마 전 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들의 활동을 지켜 볼 수밖에 없지만 기존의 업무추진 태도와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또 다른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당국자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충분한 연구와 협의절차도 없이 임기응변적 성급한 대안부터 제시하는 것이 아닌 가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후속대책은 장기적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정당성과 실효성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에게 또 다른 시행착오를 허용할 여유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후속대책 안 마련에 있어 최소한 몇 가지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주민피해보상의 우선원칙이다.

국가정책 수행의 차질로 발생한 주민의 피해는 행정수도 후속대책 일정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가장 분명하고 효과적인 주민 보상책은 계획대로 연기, 공주지역의 2,160만평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다. 이미 이 지역은 국가발전의 중심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이 전국의 관계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증명된바 있다. 국가와 지역발전의 최고의 잠재력을 지닌 필수적인 지역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것은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 국가적 목적을 위해 특정지역 주민에게 부당한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국민적 합의의 중시 원칙이다.

장기적인 국가전략과 이해의 대립이 첨예한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의 확보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절차의 중요성합의의 행정수도건설 중단이후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대책마련에 있어서는 국론통합과 국민적 화합을 이루는 데 치중해야 한다. 행정편의주의 적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의 인적구성이나 논의 장을 보다 개방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정목표 실현의 원칙이다.

대책안의 마련이 일부 비판론자들이 거론하는 충청권 달래기 용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는 또 한번 충청인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는 것이다. 행정수도후속 대책은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 실현에 부합될 수 있을 때만이 정당을 지닌다.

넷째, 집행 및 실천가능성 확보의 원칙이다.

새로운 대책은 법적, 제도적, 그리고 재정적 측면뿐만이 아니고 기술과 지역여건차원에서 집행 및 실천 가능성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행정수도 건설과 같은 대규모 국가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수도후속 대책은 시간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행정수도건설은 분권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가균형발전, 동북아중심육성시책과 연계하여 수도권과밀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국가전략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시책을 연계, 조정, 통합할 수 있는 능률적인 집행체계와 수단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미래지향성과 국제경쟁력의 확보 원칙이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이다. 새로운 대안은 수도권과밀과 지역격차와 같은 현안문제 해결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나날이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국가적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국가발전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여건과 질서 속에서 국가적 생존과 번영을 지켜내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이제는 제발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정운영 능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행정수도후속 대책 안 마련을 계기로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정파적 이해와 지역적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상생의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